

자치분권국

I . 일반현황

II .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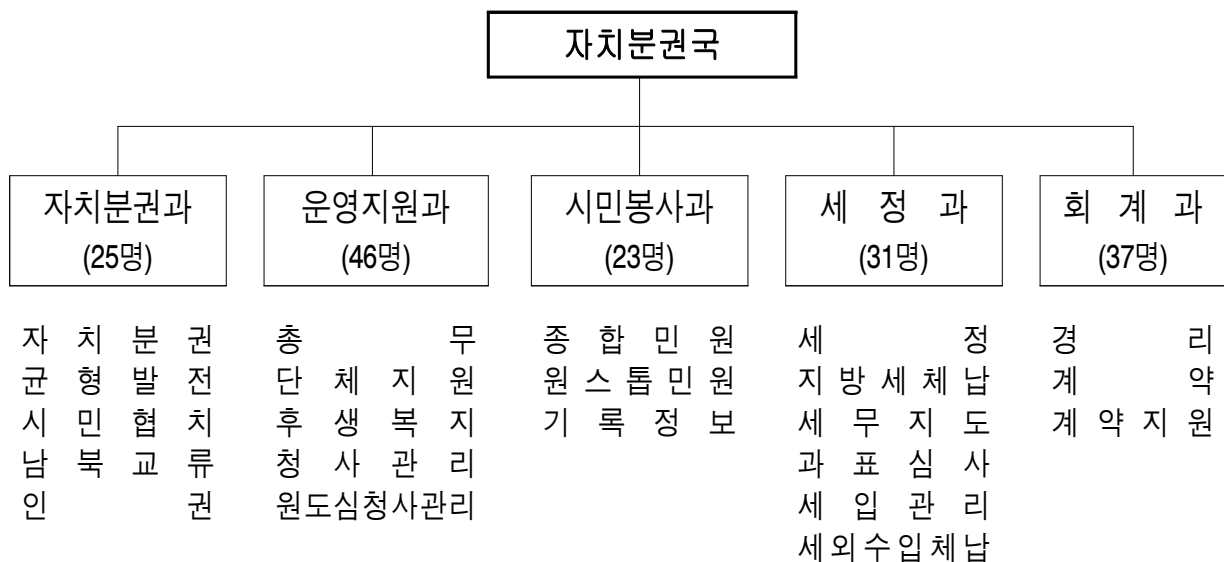
III .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

I . 일 반 현 황

① 자치분권국 기능

- 지방분권, 시민참여 및 민관협치 활성화, 지역균형발전, 남북교류, 인권
- 공무원 복무 및 의전업무, 단체지원, 후생복지, 청사관리
- 민원처리, 기록물 관리, 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지방세정 운영, 체납액 징수, 지방세입 총괄, 시 금고 관리
- 지출·결산, 계약(지원), 물품관리 등 회계운영

② 조직 및 인력 / 5과 22팀(정원 162명)



③ 2019년 예산현황 : 총201,476백만원(일반회계)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계 | 자치분권과 | 운영지원과 | 시민봉사과 | 세정과 | 회계과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예산액 | 201,476 | 10,855 | 57,733 | 1,924 | 31,730 | 99,234 |
| (세입) | (1,516,428) | (613) | (751) | (601) | (1,510,113) | (4,350) |
| 비 율 | 100% | 5.4% | 28.7% | 1% | 15.7% | 49.2% |

Ⅱ.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

2018년에는

현장중심의 경청·소통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 직접참여 기회 확대 등 시민 주권시대 선도 및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 로드맵 마련

2018 주요 성과

- 자치분권 체계 정립, 공감과 소통의 시민참여 기반 마련
 - ▶ 구별 분권토론회 개최(5회), 자치분권 추진체계 및 중점과제(5개) 발굴
 - ▶ 자치구 순회 누구나 토론회,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선정(8개동)
 - ▶ 현장시장실(월2회), 직소민원실,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
 - 남북교류협력, 과거사·민주화 재조명 및 인권 존중문화 확산
 - ▶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조성,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
 - ▶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 구조화, 남북교류협력TF 운영
 - ▶ 시민 인권보호관 확대, 시민 인권지킴이 운영(50명), 인권기자단 운영
 -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,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
 - ▶ 여권발급 연장근무, 원스톱 민원처리, 마을세무사 운영, 지방세 납부방법 다양화
 - ▶ 회계업무 전문역량 강화, 지역업체·중소기업 우선 계약,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
 - ▶ 특별휴가 확대(임신·육아 등), 휴가·유연근무 활성화, 초과근무 없는 날 운영
 - ▶ 마음힐링센터 다운 숲 운영, 직원 건강검진 매년 실시, 직원 휴양시설 확대
- ※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(세외수입분야) 우수

2019년에는

지방자치분권, 시민협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이 풍요로운 대전 건설과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

정 책 환 경

- ▶ 정부의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의 장 마련
- ▶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춘 선제적 남북교류협력사업 대응 필요
- ▶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



2019 정 책 방 향

- ▶ 주민참여와 소통,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
- ▶ 새로운 평화시대를 선도할 남북교류 협력사업 적극 발굴·추진
- ▶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한 차별 없는 균형발전 도모
- ▶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 확대로 시민 만족도 향상

Ⅲ.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

1. 자치분권 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
2. 건강한 직장문화와 시민편의 청사 조성
3.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
4. 지방세수 확충노력과 열린 세정 운영
5.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

1. 자치분권 기반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

- ◇ 시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수평적·협력적 자치분권의 기반마련
- ◇ 지역균형발전과 인권존중문화 확산,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남북협력 추진

1 시민 참여 및 소통강화를 위한 제도 확대

○ (시민참여와 소통) 시민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창구 확대

-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, 현장시장실, 시민사회단체와의 허심탄회 운영
-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결정하는 숙의민주제도 운영
· 공론조사, 타운홀미팅, 배심원 제도 등 → 지역간·세대간 갈등 해소

○ (민관협치 활성화) 시정전반에 협치를 접목,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정부 구현

-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, 민간협치협의회 구성 등 협치 생태계 조성
- 민관협치 포럼,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핵심 과제 도출 및 협치 가치 확산

○ (주민참여예산)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실현

-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예산규모 및 사업유형 확대로 시민참여 통로 다양화
· 공모사업 예산 : '19년 30억원 → '20년 100억원 → '21년 150억원 → '22년 200억원

2 시-자치구 공동협력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

○ (자치분권)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, 시와 자치구간 본격적인 자치분권 구현

- 시-구간 분권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, 수평적인 자치분권 추진
- 불합리한 사무조정, 자치영향평가, 분권지표 개발 등으로 시·구 상생 발전 도모
-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맞춰 우리시 세부추진계획 마련

○ (주민자치)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,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

- 시범사업(8개동) : 가양2, 갈마1, 진잠, 원신흥, 온천1, 송촌, 중리, 덕암
- 워크숍, 컨설팅 및 행정지원(인건비, 사업비, 운영비) / 시
- 주민자치회 구성, 자치규약 제정, 자치계획 수립, 주민총회 개최 등 / 동(구)
· 동장 내부직위공모, 동자치지원관 운영, 주민자치학교 개설, 간사(사무국) 운영

○ (동 행복센터 기능보강) 노후 청사 기능보강으로 주민자치 기반 마련

- 주민 불편 해소, 균형발전 차원 낙후지역 노후 행복센터 전략적 지원

③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

○ (균형발전 선도)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

- 지역인재 채용 관련법 개정(안) 정치권 협력 및 충청권 4개 시·도 권역화 협의
-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혁신도시 정책 관련 우리시 대응방안 연구용역(대세연)
- 지역균형발전기금(400억) 조성 / 조례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('19.3), 예산편성('19.5) 및 사업추진 등
- 예타면제사업 추진(트램 등), 지역발전투자협약(계획계약) 공모사업 발굴('19~'20년)

○ (충청권 상생발전) 지자체간 교류 확대 및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역할 수행

- G14(대전+13개 시·군·구)공동발전협의회 등과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
- 대전-세종 간 교통·환경 인프라 구축 등 상생협력 방안 강구

④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민주외거 기념사업 추진

○ (남북교류) 사업추진 기금 조성 및 추진과제 발굴 등 사업 가시화

-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50억 원 목표 / 현재 40억 원 조성
- 교류협력 경험·통일운동단체 등 민간 전문가 T/F 구성·운영
- 단기·장기 과제 분류 및 우선과제 도출, 통일부·민간단체 협의 및 사업 본격 추진
· (핵심 과제)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과학기술 교류 협력 등

○ (3·8민주외거)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, 시민공감대 확산 및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

⑤ 인권존중 문화 확산

○ (인권교육 확대) 인권의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확대 및 수준 제고

- 시민 참여형 인권교육 확대, 인권강사 역량강화, 인권교육교구 및 교재개발

○ (사업 다양화) 인권정책 홍보 확대, 다양한 인권사업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

- 인권신문발행 확대, 인권문화제 및 인권공모전개최, 인권 도서관 지정운영

○ (인권사각지대 해소) 시민단체 협력 강화 및 취약계층 인권침해 예방

- 인권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, 시민단체 인권협업 프로그램 지원
- 인권지킴이단 운영, 시민인권보호관 및 인권상담 접수 창구 지속 운영

2. 건강한 직장문화와 시민편의 청사 조성

- ◇ 일과 가정의 조화로 건강한 삶을 위한 대전형 워라벨(Work-life balance) 추진
- ◇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, 시민 편의의 청사환경과 개방형 사무공간 조성

1 직원의 효율적 근무여건 및 건강한 일터 조성

-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
 - － 가정친화 특별휴가 확대, 연가·유연근무 활성화, 초과근무 감축, 일하는 방식 개선
 - － 민선7기 「대전형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」 4대 핵심 및 6대 지속과제 추진
- 최상의 직원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일터 만들기
 - － 마음힐링센터 다운숲 운영, 직원 건강검진 매년 실시, 기초체력 측정 및 지속관리
 - － 직원 휴양시설 운영(61구좌) 및 직장동호회 지원(41개),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운영
 - － 전직원 화합한마당, 직장동호회 페스티벌 및 공무원예능작품전 개최

2 차별없는 직장문화 및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

- 공무직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 도모
 - － 합리적인 인사관리·임금체계 마련, 공무직 특별승급·전보 등 조직의 활력 제고
- 노동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
 - － 민간인 노사협의회, 공무직 임금단체협상, 공무원·공무직 노사합동워크숍 운영

3 시민이 편리한 청사환경 및 소통·협업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 조성

- 시민 중심의 공간배치 및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
 - － 시청 1층 시민몰 조성 / 시민중심 청사공간 배치 *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연계
 - － 부설주차장 경사로 캐노피 설치(2개소), 노후 블라인드 및 LED 조명(1,000여개) 교체
- 부서간 소통과 협업을 유도하는 개방형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조성
 - － 사무공간 환경개선(칸막이 조정, 소통공간 확충), 실내식물 식재 등(로비 4개소)
- 옛 충남도청사 입주기관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주요 행사 유치
 - － 정기점검(년2회), 소방 교육 및 합동훈련(년2회), 승강기 정기검사(년1회) 등
 - 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문화행사 유치(광장 등) 및 회의시설 적극 개방

3.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

- ◇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찾고싶은 열린 민원실 운영
- ◇ 정보공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

① 시민중심의 다시 찾고싶은 민원실 운영

-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발굴·시행
 - － 여권발급 연장근무(주2회), 노약자 여권 무료배송, 여권·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
 - －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,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, 민원해결사 선발
- 신속·정확한 원스톱 민원 처리로 시민편의 증진
 - －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어디서나 민원(FAX) 및 원스톱 민원 지속 발굴
 - － 법정처리기간 대비 단축률 향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

② 120콜센터 및 국민신문고 시민소통 채널 운영

- 콜센터 민원응대 역량 강화로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
 - － 상담사 친절·직무 교육, 현장부서 체험, 상담 DB관리, 시민 만족도 조사
 - － 콜센터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: 시내버스, 도시철도역, 전광판 등
-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로 만족도 제고
 - － 부서간 중복민원 조정, 민원처리기간 관리, 민원내용 및 개인정보 보호

③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서비스 수준 제고

- 안정적인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자기록물 효율적 보존·관리
 - － 기록관리시스템(소프트웨어 13종) 연중 운영 및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지속 변환
- 기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대상 확대 및 업무협약 정례화
 - － 공사공단 기록관리 담당자 교육 및 기록업무 발전 방안을 위한 자치구 업무협의회 추진
- 서고 보유 기록물 전수조사로 기록 관리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
 - － 서고별·기록 유형별·보존기간별 현황 조사 및 위치 재배열로 체계적 관리
- 선제적·능동적인 정보공개 처리로 시민 알권리 충족
 - － 원문정보공개율 향상 및 행정정보 사전 공표항목 발굴 등 능동적 대처

4. 지방세수 확충노력과 열린세정 운영

- ◇ 민선7기 시정운영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노력
- ◇ 다양한 납세편의 증진 및 세부담 완화 추진 등 납세자 중심 열린세정 운영

1 지방세수 확충노력

세수
여건

- 국세(법인세, 소득세) 증가에 따른 관련 세수 증가 예상
- '19년 경기전망 : 2.7%(한국은행), 2.8%(OECD)

세수
목표

- 목표액 : 1조 6,020억원('18년 본예산 대비 293억원, 1.9%↑)
- 지방세 1조 5,043억원(93.9%), 세외수입 977억원(6.1%)

- 체납처분(재산 압류·공매 등)과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
- 법인 세무조사, 비과세·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등 탈루·은닉세원 적극 발굴
- 지하철과 버스 승강장 영상, 언론, 홈페이지 등 홍보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

2 납세편의 증진시책 추진 등 열린세정 운영

- 지방세 납부방법 다양화 등 납세편의 증진시책 추진
 - 자동응답(ARS) 납부시스템, 신용카드, 자동이체 등
 - 가상계좌 확대 시행(1개 은행 → 2개 은행)
- 성실·유공납세자 선정 자긍심 고취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
 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, 은행금리 우대, 신용보증수수료 경감 등
- 시민의 세금고민 경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
 - 세무사 재능기부 연계 무료 세무상담 및 조세 불복청구 지원

3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-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감면 추진
-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
- 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
- 불합리한 건물과표 실거래가 수준으로 하향조정 세부담 완화

5.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

- ◇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정확한 결산으로 신뢰받는 회계기반 조성추진
- ◇ 투명한 계약 및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①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회계운영

-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
 - －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 실시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서 발간
- 지출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제공
 - － 지방재정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1일 지출현황 공개
 - － 예산집행현황, 사업 및 예산정보, 지출정보 등 공개
- 계획적인 자금배정 관리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균형집행

② 정확한 결산추진 및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

- 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 있는 완벽한 결산업무 추진
 - － 정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성과의 체계적 분석 및 재정운영 환류
 - －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시민의 재정 감시기능 강화
-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통한 내실 있는 결산검사 추진

③ 계약의 투명성, 청렴성 강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

- 정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시민만족도 제고
 - － 계약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및 계약관련 법령·예규집 발간
-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 - － 1인 수의계약 대상 하향조정(20백만원→15백만원)을 통한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
 - － 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: 발주계획, 입찰, 계약, 설계변경 및 대가지급 등
-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계약업무 통합운영
 - － 완벽한 계약업무 대행으로 투명성 확보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

